스마트농업 AI 솔루션 현장 확산 MOU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농업 생산성 향상·실질적 농가 지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그리트(주)와 경북지역 스마트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모은다. 두 기관은 29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농업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현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스마트농업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력을 결합해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 솔루션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4가지 핵심 분야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모델 현장 확산 공동협력, AI 적용 경영성과 지표개발·분석 평가 자문 및 기술지원, 온실 AI 솔루션 시스템 기술 검증 및 농가 보급 모델 개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협약 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탄탄히 구성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류광섭 그리트㈜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고도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해 경북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조영숙 원장은 "2026년 인공지능 디지털농업 원년의 출발점으로 경북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그리트㈜의 우수한 AI 기술로 농가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예천군, 우수기관에 고령군·청도군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마산항, 해수부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최종선정

2024년까지 14번 방문, 2026년 2회 기항 확정, 2027년 1회 추가 유치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최종 확정한 '신규 크루즈 기항지'에 '마산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현장평가에서 마산항의 항만 여건, 교통 접근성 및 관광자원, 국제 크루즈 확대 등 현재의 여건과 장래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 7대 기항지 중심 크루즈 관광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크루즈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해안을 접한 11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경남 마산항(창원시), 전북 새만금신항(군산시) 2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남만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산청 동의보감촌, 함안 낙화놀이 등 주요 관광지를 사전 답사하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발굴하여 크루즈 관광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크루즈 기항 경험이 있는 부산, 서산, 포항, 속초, 울산 등 크루즈 기항지를 방문하여 크루즈 유치 경험과 출·입국 절차를 시행하는 세관 등 관련기관에게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경험 등을 청취하였다고 한다.

특히, 부산·여수항보다 접근성(1시간대)이 뛰어난 전략적 마케팅으로 크루즈 선사 및 관련 여행사 등과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2026년 5월과 6월, 2027년 6월 중 MS Island Sky호(4천톤 규모)의 마산항 3부두 기항을 확정하였다.

추가적인 크루즈 기항 수요 확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중국 상해 포트세일즈 등을 통해 크루즈 선사, 여행사 등에서 경남을 방문하고 싶다는 기항의향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6건 확보하였다.

이번에 마산항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해외 크루즈 선사 대상 포트세일즈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며, 해수부·문체부 협업을 통해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규 기항지에는 국내 크루즈산업 발전협의회 참여, 해수부 크루즈 여행 공식 가이드 홈페이지 등재, 한국관광공사 주관 기항지 홍보·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최성룡 기자

건설사 3색 신호등제, 하도급률 올린다

외지시공사 대상 매월 하도급률 모니터링, 우수 건설사엔 인센티브 제공

대구시는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외지시공사 상생협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대구 지역 민간 주택건설 공사의 87%를 외지 시공사가 수주하고 있으나 지역 하도급률은 54.3%에 그쳐,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 3색 신호등제'를 도입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5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 중인 외지 시공사 24개사(45개 현장)를 대상으로 매월 하도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색, 녹색, 황색의 신호를 부여한다.

▲녹색(70% 이상): 상·하반기 실태점검 면제 및 시 홈페이지 '우수 건설사' 명단 게재 등 ▲황색(70~40%): 하도급률 제고 독려 및 관리 ▲적색(40% 미만): 실태점검 대상 우선 선정 및 도시주택국장 주재 본사 임원 면담을 통한 강력한 시정 요구

특히, 지역 하도급 실적 70% 이상으로 '녹색'을 받으면 상·하반기 실태점검 면제와 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 명단을 게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비중을 수치로 명시하는 업무협약(MOU)을 확대 체결한다.

대표적인 협력 대상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이다. 대구시는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홍보를 연 2회(8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참여 업체 수도 16개사로 늘려 전략적인 수주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윤석 기자

울산 중구,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관련 조례 일부 개정…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 및 특별휴가 신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휴식권 확대 △특별휴가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구는 개정안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더 많은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기재직휴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시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와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중구는 군 입영이 확정된 직원에게 입영일 전날과 전역일 다음날 각각 특별휴가 1일을 주고, 결혼식을 앞둔 직원에게 결혼식이 있는 주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피해 회복 및 권익 보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가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새내기 도약 휴가 2일을 제공해 공직사회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하겠다"며 "나아가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안에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중구와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성률)가 29일 '노인교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바탕으로 중구와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노인교구지도사 인력을 울산 지역 내 요양원과 노인복지회관 등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호근 기자

울주 청량읍에 '청년 주거+창업' 복합공간 들어선다!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2029년까지 302억 투입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울주군 청량읍 상남 청년특화주택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배후지역의 청년 근로자 주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특화시설 조성을 통한 창업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업지는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713-4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02억 원이다. 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08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건물은 지상 8층 1개 동 규모로 연면적 6,500㎡이며, 1~2층에는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3층에는 약 750㎡ 규모의 복합체력단련센터를 설치한다.

4층부터 8층까지는 전용면적 26㎡ 규모의 주택 100호가 들어선다. 특히 3층 전체를 청년특화시설로 조성해 체력단련실과 요가·단체운동실, 필라테스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울산시는 분야별 전문 창업자를 모집해 시설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청년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청량상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21년 도로 개설 이후 소공원과 주차장 조성 등이 지연되면서 노후 불량 주택이 존치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울주군과 노후 부지를 매입, 청년특화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으로 전환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내년 하반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하반기 토지 보상과 설계를 완료한 뒤 2028년 상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호근 기자

땅꺼짐 사고등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재난·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4년간(22.2.1.~25.12월 현재까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보장성이 높은 항목은 확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의 보험체계를 강화했다.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천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해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땅꺼짐(지하침하)' 사고 보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보장항목이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상하수도관 노후화, 대규모 공사 등으로 땅꺼짐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 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 운영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년부터 2026년 1월에 발생한 사고는 디비(DB)손해보험컨소시엄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우 기자

달서구 청소차 차고지 신청사 개소식…근로환경 개선

대구 달서구는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차 차고지 신청사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차고지 건립은 현장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행정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이다. 개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새롭게 문을 연 청소차 차고지 신청사(성서공단로 41)는 지상 4층, 연면적 1,799㎡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층별로는 ▲ 1층에 청소차량 주차장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배치해 주민 편의를 높였고, ▲ 2층에는 사무실과 휴게실, 세탁실, 샤워실 등 직원 업무 및 편의 공간을 마련했다.

▲ 3층에는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을 조성했으며, ▲ 4층은 옥상공원으로 꾸며 조경수 식재와 벤치 설치를 통해 근무자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현재 달서구 청소차 차고지에는 총 98명(공무원 16, 환경공무직 79, 기타 3)이 근무하며, 청소차량 39대(생활폐기물 15, 음식물 쓰레기 14, 노면청소차 9, 순찰차 1)를 운영해 지역 전반의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차고지는 2층, 연면적 806㎡ 규모의 노후 시설로,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약 100여 명의 환경공무직 및 운전직 공무원들이 근무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태훈 청장은 "이번 차고지개소로 청소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의 환경을 책임지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행정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2024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구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